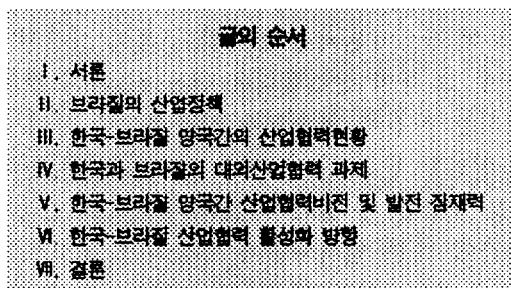


韓·브라질 21세기 産業協力의 비전과 추진방향

윤현덕(승실대학교 경제·국제통상학부)



I. 서론

브라질은 중남미 국가 중 경제규모나 국토(중남미 전체면적의 40%), 인구, 부존자원, 국제지위 면에서 가장 유망한 우리의 거점전략국가이다. 한국과 브라질의 산업협력관계는 브라질 시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브라질 양국간의 산업협력 추진이 갖는 중요한 이유는 수출입 시장의 다변화를 실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쌍방간의 기술이전, 수출입기반확대, 자원개발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매우 높다. 이러한 양국간의 산업협력은 산업구조조정측면에서의 협력으로 발전될 수 있어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산업구조 고도화의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그 동안 노동집약적인 산업과

경공업 중심의 경제성장에서 자본과 기술 집약적 중공업중심의 산업 구조로의 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져 왔다. 반면 브라질은 최근까지 외채문제와 재정적자, 그리고 저 저축률에 따른 심각한 재원부족으로 국내산업이 위축되어온 상태여서 적정기술과 재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와의 산업협력강화가 중요한 현안 과제이다. 시장잠재력이 큰 브라질 시장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남미시장의 실질적인 경제통합 등을 감안할 때에 단순한 교역증진의 형태보다는 공동개발, 기술지원, 직접투자, 합작 투자, 자본공여 등이 한국-브라질 양국간의 산업발전 정도와 특화분야 등을 고려하여 상호보완적인 관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브라질의 경우 그 동안 산업협력은 선진국들과의 관계로만 인식되어 왔으나 이러한 선진국 의존도를 상대적으로 상쇄시켜 국제적인 협력기반을 다변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한국은 생산적인 산업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 대한 인식수준이 향상되어 긍정적으로 달라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산업의 이미지가 브라질시장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기업들과 직접적인 경쟁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양국간에 산업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핵심과제는 상대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급선무이며, 이에 따라 양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수출입이라는 단기적인 틀 안에서 협력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진행되는 쌍방간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브라질과의 산업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브라질의 최근 정책적 변화와 시장 환경 등의 변화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공동과제 그리고 협력 가능성 을 고려하여 산업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브라질의 산업정책

1. 브라질 산업정책의 발전과정

브라질의 기본정책은 수입대체정책을 표방하여 내수시장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30년대부터 핵심정책 기조로 일관성 있게 채택된 수입대체정책은 경공업분야 위주로 출발하여 50년대에는 경공업에서 중공업위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수입대체정책의 한계와 급진적인 산업화 추진과정에서 경제왜곡 현상이 심화되어 경제에 극심한 혼란이 야기되었으며, 이에 결국 군사 쿠데타로 이어지면서 산업정책의 방향이 수입대체정책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수출진흥정책을 병행하는 정책적 변화가 60년대에 시작되었다. 수입대체와 수출촉진의 정책적 병행으로 브라질은 60년대 중반부터 고도성장기를 맞아 철강이나 에너지개발 등 정부 주도형 대규모사업에 치중하여 성장을 유도하였으나 정부주도형 대규모사업과 국영기업들의 경제활동 영역의 확대로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도성장기의 정부의 대규모사업은 공기업을 통하여 진행되면서 각 산업의 핵심분야별로 공기업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정부주도형 사업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져 왔지만 이를 수행하는 국영기업들이 민간기업에 비해 투자효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며, 이는 국제환경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투자 회수 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자본집약적 대규모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70년대 중반이후 브라질은 수출진흥에 초점을 맞춘 산업정책을 강조하여 수출촉진을 유도하였으나 브라질의 수출진흥정책은 주로 세제, 금융 면에서의 수출지원과 보조에 의한 수출촉진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기업의 국제경쟁력의 제고와는 무관한 정책이 시도되었다. 따라서 국제무역환경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들의 대외경쟁력과 성장력기반의 약화 등으로 수출증대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82년 외채위기로 브라질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더욱 심화되면서 종래의 수입대체정책에서 수출촉진정책으로 산업정책의 기본적인 정책기조를 전환하였으나 수출산업의 육성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으며, 브라질의 장기간에 걸친 강력한 국내산업보호정책은 외국기업의 국내진입을 과다하게 경계함으로서 브라질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으며, 수입대체의 비효율성으로 외화절약의 효과 또한 크게 기대할 수 없었다. 국내산업보호라는 명목하의 보호기간의 무한정 연장은 산업전반의 비효율성과 기술개발의 낙후성을 초래하여 국제경쟁력 제고에 치명적인 저해요인으로 부각되었으며, 따라서 수출촉진정책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위기 극복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어려웠다.

브라질이 구조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초의 외채위기 이전까지는 경제발전과 산업화가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을 정도의 눈부신 성장을 하였으며, 이는 60년대의 불황에 따른 유휴시설의 존재,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 1차 상품의 국제가격상승으로 수출의 호조와 수입의 안정성 확보, 국제무역환경의 호조와 교역량의 확대, 선진국의 대 브라질투자확대 등 전반적인 경제환경이 양호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외채위기와 더불어 국제수지 악화, 인플레이션 위기로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져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수지개선, 물가상승 억제를 목표로 총 억제정책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1995).

2. 브라질 산업정책의 새로운 방향

브라질은 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의 여파와 1980년대 초 국제금리 상승 등으로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여 세계최대의 채무국으로 전락하였으며 이러한 경제침체 국면은 더욱 악화되어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경제활동 전반의 위축은 사회적, 정치적 불안을 초래하였다. 1990년 꼴로르 (Fernando Collor de Mello) 정부의 시장

개방화, 무역자유화, 민영화 등 일련의 경제 개혁 정책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따라서 폐쇄적, 자급 자족적이었던 경제 구조가 개방적이고 시장경제지향형으로 개선되기 시작하였으며, 산업 구조 또한 공기업의 민영화 조치로 보다 효율적이고 대외 경쟁력이 있는 구조로 변화가 가능해졌다. 끌로르 정부는 '신산업정책'의 일환으로 탈국가화(PND : Programa Nacional de Desestatização) 을 발표,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실시 시도하였으나 정치적 스캔들에 휘말려 중도 하차하여 경제개혁과 민영화 노력이 정체상태에 빠져 일시적인 차질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95년 1월에 출범한 현 까르도조 정부의 경제개혁 및 개방을 위한 헌법개정노력이 강력히 추진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여 국내외 기업간 차별철폐법안과 항만, 전력, 도로, 통신, 도시가스 공급 등에 관한 정부의 독점 폐지 헌법 개정안이 의회에 통과되면서 민영화의 가속화와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폐지되었다.

94년 7월에 레알플랜(Real Plan) 도입이후 인플레가 급격히 진정되고 안정적 경제성장이 가능해지면서 민영화 노력과 함께 외국자본의 유입이 활성화되었으며, 95년 1월 1일 출범한 남미공동시장(MERCOSUL)의 결성 또한 역내교역과 대외교역을 증가시키고, 역내 시장이 확대되어 외국인 투자유입과 민영화가 더욱 가속되었다. 까르도조 현 정부의 산업정책의 방향은 민영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현재 탈 국가화와 시장경제 지향적인 경제의 운용으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며 공기업을 민간에게 이전하여 그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김원호, 1996).

민영화의 과정을 보면 제1단계 민영화는 철강, 비료, 석유화학 등 공업부문에 걸쳐 94년까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제2단계 민영화는 까르도조 정부의 관련 헌법수정 작업이 완료되면서 민영화가 전력, 항만, 통신, 도시가스 배급, 철도 및 도로 등 인프라 중심의 민영화가 지속되고 있다. 강력한 민영화정책은 적자를 기록하는 부실 공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지출을 감소시켰으며, 대규모 민영화로 장기투자를 포함한 외국자본의 유입을 촉진하여 국제수지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고, 항만, 전력, 철도 등의 부문에 민간자본을 도입하여 중·장기적 설비투자 확대를 도모하고 생산시스템을 근대화하며 아울러 인프라 장비에 소요되는 정부의 지출비용을 삭감함으로써 국가 재정수지 개선의 효과 또한 기대되고 있다(정선우, 1996).

남미공동시장 출범에 따른 지역시장 규모의 확대가 브라질의 산업 구조와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다. 외국인투자는 MERCOSUL 회원국 중 브라질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역내국가간의 산업통합, 즉 산업의 재배치와 전문화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자동차산업의 경우 생산라인의 단일화, 국가별 모델 전문화, 일부 부품의 특정국 집중생산, 역내시장을 겨냥한 신규투자 등이 시도되고 있다.

브라질의 경제개발전략이 근본적으로 지역통합을 통한 전략으로 전환되면서 산업정책의 방향 또한 역내국가간의 균형있는 산업 재배치와 대외적인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한국·브라질 양국간 산업정책의 비교분석

브라질은 1930년대부터 수입대체공업화정책을 표방하여 60년대 말까지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는 수입대체정책을 고수해왔다. 이러한 정책은 브라질이 철강, 에너지개발, 자원개발 등 중화학공업에 중점을 둘으로써 일정부분의 산업발전에 기여하였으나 공기업의 과다한 역할과 시장의 왜곡 등으로 산업전반에 걸친 비효율성과 기술개발의 낙후라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야기하기에 이르렀다. 수입대체정책 추진에 따른 경제왜곡의 현상으로 70년대의 산업화정책은 한계에 직면하여 일시적인 정책 조정기에 진입하였다. 특히 70년대에 발생한 1·2차 오일쇼크는 브라질의 산업정책의 한계점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으며, 외채문제의 심화를 가중시키게 되었다. 국내기업과 산업 보호의 경향이 강한 수입대체 경제모델이 붕괴되면서 브라질은 수출확대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공기업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민영화 정책은 외국자본의 유입을 활성화시키고 있다(서동혁, 1991).

브라질과는 달리 수출 지향적인 산업정책으로 일관해 온 한국의 경우 그 동안 브라질과의 교역에 있어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았으나 현재 한국의 경제위기와 어려움이 브라질과 같은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브라질의 대외산업정책의 변화 또한 한국기업의 진출과 교역의 활성화를 가능케 하고 있다.

III. 한국-브라질 양국간의 산업협력현황

1. 한국-브라질 양국간의 교역현황

양국간 교역량은 90년대 들어 수출, 수입 모두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93년 이후 한국의 대 브라질 수출은 매년 두배 이상 성장하였다. 90년대 이후 교역량 급증은 브라질의 경기회복에 따른 내수증가와 수입관세 인하 및 비관세 무역장벽 완화 등 수입자유화 조치에 기인하였다.

한국은 대 브라질 교역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하여 왔으나 95년부터 자동차 및 가전제품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97년 양국간 총 교역량은 29억 5천만 불로 전년(28억 2천만 불) 대비 4.3% 증가하였으나, 98년에는 국제원자재 가격하락, 아시아 경제 위기, 러시아 위기이후 경제불안이 가중되어 내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양국간 총 교역량은 24억8천만 불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대 브라질 무역수지는 수출은 17억9천만 불로 전년대비 오히려 증가한데 반해 수입은 무려 44%나 하락하여 11억 불의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232.8% 증가로 흑자 폭이 크게 늘어났다(한국무역협회, 1998). 표 1과 같이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교역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수출실적을 보면 98년 수출액이 90년에 비해 무려 18배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수입액도 크게 늘어났으나 이에

못 미쳐 지난 3년간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흑자폭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1990년대 들어 대 브라질 교역량, 특히 수출액의 증가는 브라질의 경제개혁과 수입개방정책에 따른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의 완화, 그리고 잠재 소비수요의 급증 등과 아울러 한국 가전제품과 자동차의 일본과 대만대비 비교우위 확보, 시장개척의 노력 등에 힘입어 급증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1〉 한국의 대 브라질 수출입 실적

(단위: 1,000불, %)

| 연도 | 수 출 | | 수 입 | | 무역수지 |
|------|-----------|-------|-----------|-------|-----------|
| | 금 액 | 증가율 | 금 액 | 증가율 | |
| 1990 | 106,171 | 33.1 | 706,719 | 8.4 | -600,548 |
| 1991 | 174,227 | 64.1 | 889,084 | 25.8 | -714,857 |
| 1992 | 164,465 | - 5.6 | 796,881 | -10.4 | -635,416 |
| 1993 | 448,526 | 172.7 | 779,334 | - 2.2 | -330,808 |
| 1994 | 844,175 | 88.2 | 1,019,063 | 30.8 | -174,888 |
| 1995 | 1,518,649 | 79.9 | 1,388,224 | 36.2 | 130,425 |
| 1996 | 1,497,155 | - 1.4 | 1,324,568 | - 4.6 | 172,587 |
| 1997 | 1,710,995 | 14.3 | 1,238,890 | - 6.5 | 472,105 |
| 1998 | 1,792,000 | 4.5 | 693,000 | -44.1 | 1,099,000 |

자료: KOTIS, 한국무역협회

2. 직접투자현황

우리 나라의 대 브라질 투자진출은 조립중심의 가전사 위주로 추진되었으나 최근 Mercosul 시장의 확대 추세에 힘입어 다양화,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지 투자계획은 최근 가전과 자동차 공장건립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여, 가전 3사와 자동차 3사 등 재벌그룹의 브라질 투자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음을 볼 수 있다. 삼성전자는 95년 말 브라질 마나우스(Manaus) 지역에 공장을 마련하여 12

월부터 TV, VCR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오디오, 모니터, 전자레인지 등으로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LG전자도 브라질의 사용파울로(São Paulo) 주와 마나우스에 대규모 가전 단지를 조성하여 TV, VCR, 전자레인지, 모니터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대우전자는 1차로 마나우스 지역에 연산 50만대 규모의 TV공장과 20만대 규모의 VCR공장을 건설하고, 2차로 사용파울로주에 각각 20만대 규모의 세탁기, 냉장고 공장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다. 96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투자는 한국은행 허가기준으로 23건, 총 1억 6천 3백만 불에 달했으며, 향후 대 브라질 투자는 주요 자동차업체의 진출을 통해 더욱 활발해 질 것이 기대되었으나, 한국의 경제위기에 따른 한국기업의 구조조정 등의 복잡한 국내사정으로 투자계획들이 유보 내지는 축소되고 있어 현지 정부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긴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윤현덕, 1998).

IV. 한국과 브라질의 대외산업협력 과제

1. 한국의 대외산업협력 과제

1998/99년의 경제정책 방향은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이 요구되며 경제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공고히 해야 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은 금융산업의 전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실물부문의 구조조정은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외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외환시장에서의 국제적 신뢰의 회복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경제개혁 외에 정부정책의 투명성, 각종 규제의 획기적인 철폐 등이 요구되고 있다.

96년 237억불의 적자를 나타내었던 경상수지가 97년에는 88억불로

적자 규모가 급속히 줄어들었으며, 특히 경상수지의 개선추세는 97년 말에 나타났으나 IMF 구제금융체제에 돌입하면서 수출증대를 통한 경상수지 개선은 새로운 통상과제로 등장하였다(한국경제연구원, 1997). 98년 경상수지는 무역수지의 흑자전환과 무역외수지의 축소, 이전수지의 흑자규모 확대 등으로 지난 4년간의 적자추세에서 벗어났으나 유동성 문제로 야기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상수지 흑자 목표달성을 최대의 과제로 남아있다. 그러나 아직 IMF체제하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변수가 이 목표달성과 흑자기조 유지에 관건이 될 수 있다.

2. 브라질의 대외산업협력 과제

브라질은 70년대 중반 들어 산업정책의 초점을 수출진흥정책에 맞추었으나 이 시기의 수출진흥은 무역자유화 및 국내기업의 자생력 강화에 의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제, 금융면에서의 수출지원 및 보조에 의한 근시안적인 수출촉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정책이 70년대 후반 들어 더욱 강화되어 수출증대는 일시적인 효과만 있었으며 오히려 국내기업의 성장기반 약화를 초래하였다. 외국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국내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보호기간을 일정기간이 아닌 무한정으로 연장한데서 산업전반에 걸친 비효율과 기술개발의 낙후가 산업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었다(윤현덕, 1998). 이러한 장기적이고 강력한 국내산업보호정책은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을 고착시켰으며 나아가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절대적인 원인이 되었다. 아울러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입을 지나치게 경계하여 기술축적의 기회를 감소시켰을 뿐 아니라 교역활성화에도 많은 걸림돌이 되었다.

까르도조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경제개혁 및 개방을 위한 헌법개정이 추진되면서 국내외 기업간 차별철폐법안은 물론 항만, 전력, 도로, 통신, 도시가스 공급 등에 관한 공기업의 독점을 폐지하기 위한 헌법개정안이 통과되어 민영화가 가속되면서 대 브라질 직접투자에

참여하는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폐지되어 외국인투자자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 개방되었다. 또한 남미공동시장의 출범으로 역내교역 및 대외교역이 증가하고, 역내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입이 급증하고 있어 브라질의 대외산업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최대의 관건은 국내 경제안정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조희문, 1993). 현재 브라질이 투자와 교역 대상국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외국인투자제도 개선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이외에도 안정적인 국내 경제환경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V. 한국-브라질 양국간 산업협력비전 및 발전 잠재력

1. 한국-브라질 산업협력비전

남미시장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관심이 최근 매우 높아지고 있으나 이러한 시각의 변화는 극히 최근의 일이다. 그 동안 남미지역은 정치적 불안정, 과다한 외채부담, 높은 인플레 등 정치적, 경제적 불안 지역으로 평가되어 왔다. 아울러 브라질을 포함한 대부분의 남미국가들은 경제의 개방적 운용보다는 수입대체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폐쇄적인 경제를 운용해왔기 때문에 한국과의 교역 또한 매우 저조한 실정이어서 우리의 관심 밖의 지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따라서 한국 기업의 진출이나 투자는 최근까지 전무한 상태였으나 지난 80년대 말부터 정치 민주화와 개혁 그리고 경제개혁조치에 따라 인플레의 진정과 경제의 안정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남미국가들은 이제 새로운 투자대상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우리의 보다 적극적인 진출노력과 함께 진출방법의 다양화를 추구할 단계에 있다고 하겠다.

특히 브라질의 경우 최근 경제개혁과 개방화가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일련의 조치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외국투자가

들의 인식을 바꾸어 국제금융시장에서 지난 15년간의 공백기를 깨고 브라질연방정부의 채권이 성공적으로 발행되는 등 매우 고무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금융기관들의 활동 또한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

브라질경제의 개혁과 개방화가 적극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기업들의 브라질 시장진출은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들에 비해 늦은 감이 있으나 Big Emerging Market의 하나로 남미시장의 교두보 확보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윤현덕, 1998). 그러나 우리 기업들은 외국 기업들에 비해 대 브라질 시장 투자 경험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시장에 대한 인식 및 이해수준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남미 시장의 진출을 위해 현지 문화환경과 투자환경의 이해가 시급히 필요하며 아울러 투자의 형태와 방법에 있어서도 현지 사정에 적절한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현재 브라질의 해외자본 유치현황과 외국투자가들의 투자패턴을 볼 때 단순 무역이나 생산시설에의 투자에서 벗어나 브라질 시장의 효율적인 공략을 위해 수출입과 해외투자 그리고 자본투자를 적절히 혼합시킨 총체적인 진출전략을 수립하여 투자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하겠다. 특히 브라질 경제의 활성화와 이에 따른 외국투자가들의 신뢰회복 그리고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브라질은 매우 유망한 투자대상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브라질 정부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경제의 개혁, 개방화와 함께 경제협력지역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세계화전략의 적극적인 추진과 남미지역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인 무관심에서 탈피하면서 브라질이 추구하고자 하는 미국, 일본, 독일, 이태리 등 선진국에 대한 투자 및 자본의존도를 상대적으로 낮추고 교역국의 다양화 등과 맞물려 투자환경과 진출잠재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어 한국과의 산업협력의 가능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볼 수 있다. 한국-브라질간의 산업협력증진 가능성의 주요 변화요인들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민영화와 규제완화에 따른 산업협력의 가능성

수입대체 정책을 근간으로 한 중남미국가들의 경제정책은 정부 주도하의 공기업 규모와 범위를 확대시켜 공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 왔다. 특히 철강, 광산, 석유 등 자원개발사업과 수도, 전기, 가스등의 공공사업부문이 공기업화의 주 대상이었으며 이는 생산활동에 필요한 기본 요소의 저렴한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을 수 있으나 공기업들이 차관유치 및 조직확대 등에서 상당기간 자율권을 가지고 방만한 경영을 함으로서 비효율적, 저생산성 등의 문제로 적자경영의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정부에 엄청난 재정 부담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80년대에 남미국가들의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공기업의 민영화가 구조조정 정책의 필수요소라는 점이 대내외적으로 인식되어 민영화에 착수하였으나 노조와 재계로부터의 강한 반발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민영화가 재원확보가 어려운 자국기업들의 참여보다 오히려 국제금융시장에서 외자도입이 용이한 외국기업들에게 유리한 입지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었으나, 현재 민영화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법적인 체제도 구비되어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는 남미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유시장의 원리가 도입되면서 완화되었으며, 특히 외자유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외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자본시장 정비, 투자인센티브의 확대와 세계상의 혜택 등이 도입되어 투자여건이 개선되었다. 민영화를 통하여 정부의 역할은 단지 정책 결정이라는 것이 부각되고 실질적인 경제행위의 참여가 적어지면서 규제 완화 효과를 가져왔으며 이 또한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2) 무역자유화에 따른 산업협력의 가능성

수입대체정책에 따라 남미국가들의 무역정책의 기본 방향은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정책기조를 유지하여 왔으며, 이는 각 분야의 산업을 보호 의존적 구조 속에 묶어 국제경쟁력의 저하를 초래

하였다. 각 산업은 보호주의적인 정책에 따른 비효율성과 대외 경쟁력 감소는 결국 정부의 경제관여도를 높여 공공부문의 확대를 초래하였고, 이는 재정적자와 국제수지 악화, 인플레 유발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었다.

개방화되고 있는 세계 시장환경 변화에 역동적인 대응과 한계에 도달한 수입대체정책의 대안으로서 수출 지향적인 발전전략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남미에서의 무역자유화는 칠레가 70년대 중반에 시작하여 가장 개방된 경제모델로 등장하였으며 80년대 중반부터는 무역자유화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폐루,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등 남미 전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주요 무역자유화 조치는 수입 쿼터제 폐지, 비관세장벽의 관세화, 평균관세 인하, 수출세 철폐 등으로서 80년대 중반에 평균 50%를 넘는 수준의 관세율이 최근에는 20%미만으로 낮아졌으며 관세 편차도 크게 줄었다. 관세율은 현재 최고 관세율이 10%-35%, 평균관세율이 7%-18% 수준으로서 수출 지향적 무역자유화가 국제무역의 확대, 역내무역의 활성화를 촉진시켰으며 양자간, 다자간 자유무역을 활성화 시켜 지역경제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8).

(3) 지역경제 통합화에 따른 시장확대의 가능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남미지역에서 지역국가들간에 추진되어온 주요 경제통합 관련 기구를 보면,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 연합(LAFTA),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LAIA), 브라질-아르헨티나 통합협약, 안데안 공동시장(ANCOM), 칠레-멕시코 자유무역협정, 미주통합구상 등을 들 수 있고 중미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상당히 많다(조희문, 1993). 이와 같이 중남미지역에서 경제통합이 빈번하게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원래의 기구창설의 목표에 비하여 그 추진성과가 크게 못 미치거나 그 파급효과가 그리 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 회원국과 칠레와 볼리비아를 준 회원국으로 하는 MERCOSUL은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공동시장의 형성에 따라 시장규모확대, 상품 및 부품의 표준화, 산업구조의 재편, 직접투자 및 전략적 제휴의 증가 등 역내외 기업들의 경쟁환경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

경제규모가 남미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이 지역의 대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종래의 다자간 무역체제 하에서 무역증진을 도모하기 보다는 우선 양국간의 교역증대를 통하여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실리추구적인 입장에서 출발하여 MERCOSUL 협정을 가능케 하였다(Almeida, 1993). 특히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1990년대 들어 과거의 보호주의적인 경제체제를 시장지향적인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거시경제 안정과 성장을 이루함으로써 더욱 활성화되고 있어 그 발전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MERCOSUL이 공동시장으로 완성되기까지는 회원국들의 만성적 인플레, 회원국간 환율조정체제 결여, 정치적 불확실성, 경쟁적 생산구조 등 극복되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어 아직 그 효과와 영향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시장의 잠재성을 확인한 외국인투자의 쇄도와 회원국들과의 협력과 제휴에 대한 관심 등을 볼 때 한국기업들도 MERCOSUL 경제통합을 통한 기업경쟁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한 진출 전략과 현지경영 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2. 한국-브라질 산업협력증진 과제

(1) 교역시장 다변화와 안정적 자원의 확보

브라질은 인구 1억6천만의 시장과 GDP 규모 9천 억불의 남미대국으로서 그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80년대의 경제적 불안정으로 한국 정부나 기업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으나, 최근 시장 지향적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잠재시장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 특히 IMF이후 환율변동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한국 수출상품의 시장변화가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남미의 최대시장인 브라질의 변화는

수출시장 확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진출 노력이 요구된다.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 등의 선진국들은 브라질 시장의 잠재성을 고려하여 자본공여와 직접투자는 물론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 등과 같은 방법으로 현지진출기반을 유리하게 조성하여 나가고 있다. 국제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대안이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신장이라고 한다면, 경제안정화에 성공하고 있는 브라질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브라질과의 산업협력은 교역시장다변화 차원에서 볼 때 상품교역 뿐만 아니라 대형설비플랜트사업, 인프라 확충에 따른 사업 등의 분야에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브라질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관계의 활성화는 시장원리에 기초한 교역 보다는 이른바 정책결정 차원에서 정부간 교섭에 의해 산업협력의 성격 및 방향이 결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본 방향의 합의는 현지 시장의 개척과 진출을 원활히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산업협력을 통한 양국간의 관계증진은 자원확보라는 차원에서 또 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브라질은 세계적인 자원국으로 자원이 절대 부족하고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에게는 우호적이고 안정적인 자원공급 체제 구축이 국제 경쟁력 확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브라질의 부존자원 보유현황을 보면, 철광석(2위), 보크사이트(3위), 아연, 주석, 망간, 니켈 등 세계적인 매장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세계 총 생산량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은 중요한 광물자원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자원들의 매장량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천연자원의 보고임이 널리 알려져 있다(박영호, 1993). 자원의 절대 부족의 문제와 수입 의존의 문제해결은 우리 나라의 국제 경쟁력 특히 수출 경쟁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체제 구축이 요구되어 오고 있어 브라질의 자원을 개발, 수입하거나 공동개발을 통하여 제3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원확보 측면과 이를 통한 산업협력

의 활성화는 브라질 시장에서 우리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의 기회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2) MERCOSUL시장 내에서의 입지강화

1) MERCOSUL 경제통합의 효과

MERCOSUL 경제통합의 수준이 공동시장이나 경제동맹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생산요소가 회원국간에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생산요소의 최적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회원국간에 금융 및 재정정책의 조화가 달성됨으로서 경제의 효율성이 일층 더 제고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효과에 추가하여 고려되어야 할 MERCOSUL형성의 효과로서는,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을 창설할 경우 무역창출 효과와 무역전환 효과가 일반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이다. 무역창출 효과란 이러한 경제통합이 일어날 경우 회원국이 이제까지 서로 간에 부과하여 오던 무역제한조치를 철폐 또는 완화함으로써 회원국들의 무역이 확대되는 효과를 말한다.

무역전환 효과란 회원국들이 공동시장을 형성하게 됨에 따라 종전에 역외국가들로부터 수입이 역내국가들 간의 교역으로 전환되는 효과를 말한다. 한편으로는 MERCOSUL 역내기업들에게 유리한 제품 및 기술표준, 관세 및 현지조달비율의 강화 등을 통한 역외기업에 대한 차등대우로 인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역내시장완성의 결과로 유발될 역내기업들의 생산성 및 경영효율 향상에 기인하여 무역전환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역내시장규모의 확대에 기여하는 한 요인인 된다.

MERCOSUL 공동시장의 형성은 회원국에게 새로운 국제적 안목과 시야를 확대해주는 효과도 초래할 것으로 기대되어 남미의 비 회원국들에게도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남미국가들이 MERCOSUL 결성을 통하여 북미 자유무역 연합, 유럽공동시장, 그

리고 남미의 여타국가들과의 협상력을 제고하여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은 물론 이 지역의 새로운 역할과 위상을 국제사회에 제시하는 계기로 삼고자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주축이 되어 추진된 NAFTA결성은 세계경제의 불러화 추세에 대한 자기 방어적 조치였다. NAFTA협정은 미국시장에서의 남미산 상품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남미국가들의 대미 수출품목들에 많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MERCOSUL 형성과 개방정책에 힘입어 오히려 교역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지난 1990년 7월 부시 미대통령은 교역, 투자, 외채를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와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자 미주통합에 관한 조치(The Initiative for Americas)를 선포하였다. 북미와 남미 두 대륙에 연계하여 자유무역지대 결성을 시도하고, 이 지역시장에 자본 유입과 국제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외채부담을 감소시킨다는 구체적인 계획이었다. 미국 측의 이러한 조치는 한편으로는 세계적 경제 불러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적 대응결과이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남미 지역경제에 새로운 기대와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과 라틴아메리카간의 의존적 관계는 각 나라의 경제발전 수준과 교역패턴에 따라 크게 다르다. 예를 들어, 1992년도 멕시코의 미국시장 의존도는 총 수출액의 67%에 달하는 반면, 파라과이는 8%, 우루과이는 9%에 지나지 않으며, 베네수엘라, 칠레, 에콰도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은 이보다 더욱 낮은 수출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80년대에 들어 남미국가들의 미국시장수출이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남미국가들의 미국시장점유율도 1970년 10.1%, 1980년 11.1%, 1990년 10.8%로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미와 남미간에 연계하여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면 관세와 비관세장벽이 해소됨으로써 남미상품의 북미시장 진출의 기회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쿨롬비아, 엘살바도르, 폐루, 칠레,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베네수엘라, 에콰도르는 이미 기본 협정을 초안하여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 바 있으며, MERCOSUL 회원국들의 경우 역내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지는 대로 NAFTA와의 연계를 추진할 방침으로 있다 (Barham, 1994).

최근 변화가 일고는 있으나 아직 많은 구조적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브라질이 NAFTA 회원국으로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요원하며, 경제안정의 기조를 쌓아가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도 아직 불확실한 요소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서 MERCOSUL이 가까운 시일 내에 NAFTA와 직접 연계될 가능성은 없다(Almeida, 1992). 그러나 다소 느리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해온 대로 개방경제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하고 역내 경제의 활성화를 달성하게 된다면, 또한 준 회원국이 된 칠레와 볼리비아와 같이 회원국이 확대되고 충분한 효과가 가시화 된다면 MERCOSUL의 영역이 확대되어 NAFTA에 대한 협상력이 크게 신장될 것이고, 두 대륙간에 연계된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미와 유럽공동시장의 관계도 북미와의 통상 및 교역관계에서 나타난 양상과 매우 유사하다. 남미경제에 미치는 유럽의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추이를 보여왔었으며, 특히 80년대에는 유럽경제의 침체와 남미의 외채문제 및 경제악화로 인하여 양 대륙간의 통상 및 무역관계는 저조하였다. 그 결과 지난 70년대 남미지역에서 수출시장의 유럽공동시장 지역에 대한 의존도는 평균 28%수준이었으나 80년대 중반에는 불과 19%수준으로 크게 감소되었으나 최근 상승세에 있다.

그러나, 유럽공동시장의 결성은 관계개선에 새로운 국면을 조성하고 있고, 남미국가들의 수출신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공동시장 역내국가들이 보유하는 비교우위와 역내국가들 간의 보완적 관계 때문에 남미상품의 수출이 오히려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나, MERCOSUL 회원국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주화, 민영화, 개방화 현상은 외부와의 정치적 경제적 교류를 증진시킴으로써 EU 지역과의 교역이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MERCOSUL 회원국들의 유럽공동시장과의 경제적 교류를 현재의 정치적 관계 수준 이상으로 높이며, 각 회원국들의 입장을 사전에 조율하여 유럽공동시장과의 모든 협상에서 공동전략을 추진하도록 하며, 기술 및 금융 면에서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수출신장의 수단으로 사용하며, 유럽공동시장의 요구수준에 합당한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2) MERCOSUL 형성에 따른 경쟁환경의 변화

관세동맹 및 공동시장의 형성은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파악되는 제반 효과 이외에 주요 경제단위인 기업의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경쟁환경여건에 많은 변화를 초래한다. MERCOSUL 형성이 시장규모확대, 상품 및 부품의 표준화, 산업구조의 재편, 직접 투자 및 전략적 제휴의 증가 측면을 중심으로 기업의 경쟁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i . 시장규모확대

MERCOSUL 형성에 따른 변화 아직 전반적인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아순시온 협약 아래로 많은 이견과 잡음을 발생시켜온 가운데에도 이들 회원국들은 공동시장형성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여 왔고 그 결과 회원국간의 교역은 크게 증가하였다.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의 최대 수출국이며,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의 제2의 수출시장이고, 석유공급원이다. 아르헨티나의 브라질에 대한 수출이 최근 급증하면서 무역수지 상의 적자가 대폭 감소되는 가운데 양국간의 무역수지도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역내교역의 급증현상은 역내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규모의 대폭 확대를 뜻한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간의 교역이 급증한 것은 양국의 경제가 서로 보완적인 측면도 많이 보유하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는 에너지 생산량이 풍부하지만 브라질은 그렇지 못하다. 1993년도 아르헨티나는 사우디 아라비아에 이어 브라질에 두 번째로 많은 석유를 공급하는

나라였다. 브라질 전력생산의 대부분은 수력발전인데 비하여 아르헨티나는 대형 화력발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

또한 아르헨티나는 곡물생산량이 자체수요를 크게 능가하지만, 브라질은 식품 수입국이다. 아르헨티나의 산업설비는 이미 낙후되어 있어,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보다 훨씬 큰 브라질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브라질의 산업은 아르헨티나에 비해서 보다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에 기존의 브라질 소비자 1억 6천만에 3천 3백만 아르헨티나의 소비자를 추가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은 매력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MERCOSUL 공동시장의 출범에 따른 시장규모의 확대현상을 분석함에 있어 공동시장형성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문과 그렇지 못한 부문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공동시장의 규모에 수치를 보면 역내 인구 1억 8천 6백만, 총 면적 1천 2백만 평방 킬로미터로서 상당히 큰 규모이지만, 고르지 못한 도시발달 상황 및 교통과 통신 등의 인프라 관한 여건을 감안하면 실제로 초기단계에는 역내 인구 전원과 역내 지역전부가 MERCOSUL 공동시장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되지는 못할 것이다. 공동시장의 혜택을 받게될 면적과 인구는 상당히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개념의 MERCOSUL은 우선적으로 4개국의 접경지역과 소비시장의 집중된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향후 발전단계에 따라 점차적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브라질의 경우는 경제권이 집중된 중동부 지역(뽀르또알레그리(Porto Alegre), 벨로오리존찌(Belo Horizonte), 리オ데자네이로(Rio de Janeiro)를 연결하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MERCOSUL의 영향권에 속하고, 아르헨티나는 코르도바(Cordoba), 멘도사(Mendoza),를 잇는 경제권이 수혜지역에 속한다(조희문, 1993).

ii. 상품 및 부품의 표준화

MERCOSUL 공동시장형성으로 예견될 수 있는 주요 현상의 하나

는 생산, 판매, 유통, 광고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종전에 비하여 국가별로 차이를 두지 아니하고 제품을 표준화하여 공급하는 경향이 증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회원국간에 자유로운 상품이동이 가능하게 되고, 기술 및 제품표준의 공동설정이 추진됨에 따라 종래에는 개별국가 중심으로 경영전략을 추진해 왔지만, 이제는 공동시장 전체를 단일시장으로 간주하며 경영전략을 펼치는 기업들이 날로 증가하게 될 것이며(Almeida, 1993), 이는 많은 기업들이 표준화된 제품의 생산규모를 증대시켜 생산공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로서 얻어지는 원가절감의 효과는 가격인하를 통해 고객에게 이전되거나 시장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 등에 재투자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각 국가별 고객특성에 적합하도록 개발되는 비표준화 제품들도 경쟁적 위상을 유지할 여지는 있으나 이를 제품과 MERCOSUL전역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제품들 간의 가격차이가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부분적으로 이미 기업들의 형태에 반영되고 있다. 폭스와겐(Volkswagen)과 포드(Ford)사의 합작회사인 아우토라티나(Autolatina)는 종전에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각기 개별시장으로 취급하였으나 이제는 양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간주하고 모든 부품과 제품을 표준화하기로 하는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아르헨티나의 코르도바(Cordoba)에 소재하는 신설공장에서 생산하는 트랜스미션을 이 회사가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중형차들에 장착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식품회사들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브라질의 최대 식품회사의 하나인 사디아(Sadia)는 아르헨티나의 한 회사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합작기업을 설립하여 자사상품의 유통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 회사는 리오데자네이로부터 사용파울로, 남부 브라질,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거쳐 칠레의 수도 산티에고에 이르는 남미의 GDP 65%를 생산하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이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이고, 아르헨티나 기업과의 합작은 이러한 전략의 일환인 것이다

(Barham, 1994).

역내 국가들 간의 교역의 증대와 관광 등을 통한 접촉의 증대는 이 지역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의 모방과 동일화를 촉진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또한 기업 측이 상품 및 부품의 표준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iii. 산업구조의 재편

역내 산업구조에 대한 MERCOSUL 자체의 효과만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오랜 기간 수입대체 정책을 추구하며 국내시장 위주의 폐쇄적 경제정책을 추진해오던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대외 지향적인 경제체제를 도입하는 단계에서 MERCOSUL 공동시장이 출범하게 된 것이며, MERCOSUL 없이도 이를 국가들이 교역은 증대될 것이고, 산업구조의 재편이 진전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MERCOSUL 공동시장의 형성은 이러한 현상들을 더욱 촉진하는 요인임에는 틀림이 없다.

공동시장의 형성과 더불어 상품, 노동 및 자본의 국가간 이전이 자유로워지고, 상품 특성 및 소비특성이 표준화됨에 따라서, 기업들이 추구하는 전략적 시장단위의 규모가 증대하게 되면, 그 결과로서 기업의 생산 및 영업단위도 확대될 것이다.

생산 및 영업단위의 확대현상은 이미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향후 더욱 가속화되리라 전망된다. 생산 및 영업단위의 확대는 두 가지 차원의 통합에 의해서 진행된다. 첫째, 개별 기업들 내에서의 제조부문 및 유통부문에 현재보다 큰 규모를 갖춤으로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의도에서 기업 내부적으로 각 부서간 또는 생산단위간에 추진되는 통합이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많은 기업들이 보유, 운영하게 되는 생산 및 유통시설은 종전에 비하여 그 수는 감소되는 반면에 규모는 증대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국경에서의 통관에 현재 소요되는 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고 있고, 철로표준의 차이 및 트럭운송에 관한 규제로 인하여 국경을 넘을 때에 현지의 운송수단으로 바꾸어 적재하고 운송해야 하는 많은

번거로움과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있는데, MERCOSUL의 출범과 더불어 이러한 점들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Barham, 1994). 이에 따라 역내 국가간의 운송효율이 제고되고,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시간에 관하여 어느 정도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게 되면, 유통비용의 절감과 물류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며, 그 결과 물류 및 유통부문의 관리도 종전에는 개별시장 단위로 이루어지던 것이 공동시장 단위로 집행될 것이다.

둘째, 경제통합의 결과로 시장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기업들 간에 합병 및 매수를 통해 생산의 효율성 및 시장 장악력의 제고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 집중화 현상이 진전될 것이다. 브라질 경제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아직 커다란 움직임은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으나, 브라질의 공기업 민영화는 MERCOSUL의 정착과 함께 기업들 간의 합병과 매수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시장통합 조치의 산업별 영향을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그 영향의 크고 작음을 예측하는데는 몇가지 지침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산업들에서 공동시장 형성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즉, ① 규모의 경제효과가 현저한 산업, ② 잉여생산설비의 비중이 높은 산업, ③ 대규모의 연구개발투자가 필요한 산업, ④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의 한계효과가 체증적으로 나타나는 산업, ⑤ 역외국가로부터의 경쟁압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산업, ⑥ 현재 회원국간에 높은 무역장벽이 구축되어 있는 산업, ⑦ 회원국간에 가격차이가 큰 산업, ⑧ MERCOSUL 기술표준에 의하여 직접 영향을 받는 산업, ⑨ 변화의 필요성이 인지되어 온 산업 등은 공동시장형성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Almeida, 1993).

이와는 대조적으로 ① 경쟁의 범위가 이미 범세계적인 산업, ② 회원국별로 소비자의 취향이 큰 차이를 보이는 산업, ③ 현존 무역장벽에 의하여 제약받는 바가 별로 없는 산업, ④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문이어서 무역장벽의 철폐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문(예를 들면 의약품산업), ⑤ 시장통합조치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국가별로 보호되는 산업 등에 있어서는 시장통합의 영향이 그리 두드러지게 나

타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iv. 역외기업에 의한 직접투자 및 전략적 제휴의 증가

MERCOSUL 회원국들이 현재의 개방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정책을 지속하며 공동시장형성을 위한 단계적 조치들을 계속해서 취해 나간다면, MERCOSUL 역내시장이 제공하는 매력에 이끌려 시장확보, 생산효율성확보 및 자원확보를 목표로 하는 외국인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미에서 활약하고 있는 주요 외국기업들로서는 미국계의 제네럴 모터스(General Motors), 포드(Ford), 알코아(Alcoa), 다우케미칼(Dow Chemical), 엑손(Exxon), 텍사코(Texaco), 옥시덴탈(Occidental Petroleum), 화이어스톤(Firestone), 굳이어(Goodyear), 허니웰(Honeywell) 등이 있고, 독일계의 다임러벤즈(Daimler-Benz), 지멘스(Siemens), 휴스트(Hoechst) 등과, 영국의 로얄더치쉘(Royal Dutch-Shell), 바트(BAT Industries), 일본의 혼다(Honda), 토요다(Toyota), 후지(Fuji), 코마츠(Komatsu), 히타치(Hitachi) 등이 매우 활발한 현지 생산활동과 투자를 하고 있다(The Economic Intelligence Unit, 1993-1998).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주축으로 추진되고 있는 MERCOSUL 공동시장은 회원국들간에 많은 갈등과 마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더욱이 안데안 협약의 회원국들인 칠레와 볼리비아가 준회원국의 자격으로 MERCOSUL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향후 MERCOSUL과 안데안 협약국의 통합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아울러 MERCOSUL의 잠재력을 더 한층 증대시켜 주었다. 아직은 그 가능성이 불투명하지만, 브라질이 희망하는 대로 MERCOSUL과 안데안 협약국들과의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어 범남미자유무역지역이 형성되면, 국제사회에서 브라질은 세계의 열강대열에 낄 수 있게 될 것이다(McKinsey Global Institute, 1998).

단기적으로는 MERCOSUL이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다. 현재로서 북미와 남미를 연계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에 관한 구상이 NAFTA와 MERCOSUL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해온 대로 MERCOSUL역내에서 민주화, 개방화, 민영화가 지속 확대되고 경제적 안정기반이 구축되고, 또한 칠레와 볼리비아를 위시한 주변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MERCOSUL의 영역이 확대된다면 NAFTA에 대한 협상력도 크게 신장될 것이다.

MERCOSUL의 형성은 회원국 내부의 민주화, 민영화, 개방화가 전전되는 추세와 더불어 유럽연합과의 정치적 경제적 교류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MERCOSUL회원국들은 유럽연합과의 경제적 교류를 현재의 정치적 관계와 같은 수준으로 높이며, 각 회원국들의 입장을 사전에 조율하여 유럽공동시장과의 모든 협상에서 공동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고, 기술 및 금융 면에서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수출신장의 수단으로 사용하며, 유럽공동시장의 요구수준에 합당한 품질기준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있다.

MERCOSUL 공동시장이 완성되기까지에는 만성적 인플레, 회원국 간 환율조정체제 결여, 정치적 불확실성, 경쟁적 생산구조 등 극복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어 아직 그 효과와 영향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MERCOSUL가 남미지역에서 추진되어온 과거의 경제통합 조치들을 시금석으로 삼아 실리추구적인 접근방법을 신중하게 취해옴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하고, 향후 중요한 경제블럭으로서 부상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시점에 MERCOSUL회원국들과의 교역 및 투자가 미미한 수준에 있는 우리로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향후의 진전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남미 최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 시장에 한국 기업의 진출과 산업협력 관계의 활성화는 브라질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MERCOSUL 회원국 시장 진출에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다.

(3) 브라질의 정책전환과 대외산업협력의 필요성 증대

브라질은 수입대체 공업화 정책을 표방하면서 산업발전을 추구해 왔으나, 이러한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은 위에서 여러 번 지적한바와 같이 경제안정 달성과 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이 불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과거의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공업화정책을 수입대체에서 수출촉진정책으로 전환, 공업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경제의 건실화를 대외협력을 통해 달성한다는 방침 하에 많은 개혁과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제조업 생산능력 및 부가가치 확대를 위해 제조업에 대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자본 부족분을 해외에서 조달하되 외채누증의 전례를 교훈 삼아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주력을 하고 있다. 구조조정정책 방향은 크게 시장자유화, 공기업의 민영화와 자율화, 외자유치 자유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McKinsey Global Institute, 1998).

브라질은 어려운 경제침체에서 벗어나면서 경제성장을 위한 소요자본의 국내조달이 어려운 상태이며 자력의 자본확보와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수출능력의 배양과 주력 그리고 외국자본과 투자의 유치가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외산업협력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이를 위해 브라질 정부는 MERCOSUL 회원국들을 포함하여 주요 교역국들과의 관계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다. 브라질은 80년대 후반부터 대외산업협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는데, 선진국 중심의 산업협력에서 한국과 같은 나라를 새로운 협력파트너로 확대하려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과의 산업협력의 결과가 종속의 심화, 고급기술의 흡수 능력부족, 기술인력 양성의 실패, 국내산업의 경쟁력 상실 등 오히려 산업육성에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면서 한국과 같은 새로운 파트너로부터 적정기술과 자본, 개발경험 등의 도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선진국과는 별도로 새로운 차원에서의 산업협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의 산업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VI. 한국-브라질 산업협력 활성화 방향

한국-브라질 양국간의 산업협력 추진이 갖는 중요한 이유는 수출입 시장의 다변화를 실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쌍방간의 기술이전, 수출입기반확대, 자원개발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매우 높다. 이러한 양국간의 산업협력은 산업구조조정측면에서의 협력으로 발전될 수 있어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산업구조 고도화의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그 동안 노동집약적인 산업과 경공업 중심의 경제성장에서 자본과 기술 집약적 중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져 왔다. 반면 브라질은 최근까지 외채문제와 재정적자, 그리고 낮은 저축률에 따른 심각한 재원부족으로 국내산업이 위축되어온 상태여서 적정기술과 재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와의 산업협력강화가 중요한 현안 과제이다. 시장잠재력이 큰 브라질 시장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남미시장의 실질적인 경제통합 등을 감안할 때에 단순한 교역증진의 형태보다는 공동개발, 기술지원, 직접투자, 합작투자, 자본공여 등이 한국-브라질 양국간의 산업발전 정도와 특화분야 등을 고려하여 상호보완적인 관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브라질의 경우 그 동안 산업협력은 선진국들과의 관계로만 인식되어 왔으나 이러한 선진국 의존도를 상대적으로 상쇄시켜 국제적인 협력기반을 다변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한국은 생산적인 산업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 대한 인식수준이 향상되어 긍정적으로 달라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산업의 이미지가 브라질시장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기업들과 직접적인 경쟁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양국간에 산업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첫 번째 과제는 상대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급선무이며, 이에 따라 양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수출입이라는 단기적인 틀 안에서 협력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진행되는 쌍방간의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브라질간 산업협력 활성화를 추진하는 주요과제들을 무역과 투자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1. 무역확대를 통한 산업협력

한국의 수출여건의 악화로 해외시장의 다변화가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중남미시장에서 가장 시장잠재력이 큰 브라질시장으로의 무역 확대에 따른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은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국 시장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줄여 나가고자 하는 브라질의 수출입시장 다변화 정책과 맞물려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적절한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브라질 시장에 대한 무역의 흐름을 보면 한국의 중공업분야, 특히 전기, 전자, 자동차 등의 수출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이미지 향상과 경쟁력 또한 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 선진국들이 점유하고 있는 브라질의 공산품수입시장에 대한 한국상품의 시장점유율이 현실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러 산업분야에서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대 브라질 무역의 구성을 보면 철강, 비금속광물, 가공 농산물 등과 같이 자본집약중간재와 일차 농산물의 수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이 수출특화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 브라질 수출 특화가 가장 심화되어 있는 것은 내구성소비재로서 가전제품, 전기 기기, 자동차 등으로서 거의 완전한 수출특화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브라질간의 무역특성은 한국과 브라질간의 산업성숙도와 비례하는 것으로 원자재관련 산업을 제외하고는 제조업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출특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비내구성 및 내구성소비재산업은 우리나라의 수출특화현상이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고 철강, 화학제품, 비금속광물, 농가공물 등은 지속적으로 수입특화가 지속될 것이다.

한국과 브라질간 무역흐름이 한국의 공산품에 대한 수출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한국 상품의 경쟁력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 그

동안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 등에 집중되어 있는 브라질의 공산품 수입시장에 대한 부분적 확보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산품에 대한 한국 상품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브라질의 민영화에 따른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고 산업자체가 확대 성장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정보통신, 제철, 제강, 석유화학, 전력, 항만, 철도 및 도로 분야에서의 한국 상품 수출 가능성을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정부의 수출금융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며 아울러 교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외교 통상 측면에서 공감대를 구축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조치는 한국기업과 상품의 브라질 시장에서의 기반을 확고히 해 줄 수 있다. 아울러 MERCOSUL 시장의 구축은 브라질 시장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더욱 높아 졌음을 의미 하며 특히 이 지역의 경제블록화에 우리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MERCOSUL의 주축국인 브라질과의 협력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이러한 무역증대를 통한 산업협력의 노력은 교육, 과학기술 교류, 외교 통상, 문화적 교류 등의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증진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이를 위한 정책간의 조율과 일관성 유지가 요구된다.

2. 투자증대를 통한 산업협력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브라질 시장 진출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을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시장점유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어 시장 개척차원의 현지생산거점 확보가 장기적으로 볼 때 요구되고 있다. 또한 한국기업들이 추구해야 할 투자의 형태도 부품과 자재조달을 현지에서 하여 현지조달비율을 높이고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현지 일괄생산방식이 필요하며, 아울러 현재 브라질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매우 적극적이나 외국자본이 브라질을 단순조립을 위해 활용할 경우 자국경제와 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는 이유

로 많은 제재와 함께 기존의 인센티브 등을 철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현지에서 일괄생산방식의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져 진행되는 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업체들의 동반진출이 바람직하다. 동반진출은 단독투자나 현지기업과의 합작투자에 비해 협력업체와의 기존의 관계가 연장되어 원활한 협력관계로 규모의 경제에 따른 이익, 안정적인 계약관계유지, 가격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생산체계 등으로 현지에서 요구되고 있는 부품과 자재의 현지조달비율 증대 및 반제품현지생산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인 부품조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3. 자원개발을 통한 산업협력

자원의 해외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으로서는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브라질과의 자원 공동개발참여는 매우 중요하여 이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크게 달라져야 한다. 단순한 자원의 장기수입계약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산업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자원확보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자원의 공동개발은 산업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고 장기적인 관계 구축에 양국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자원개발을 통한 산업협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첫째는 자원에 대한 직접투자 혹은 합작투자이고, 둘째는 자원개발을 위한 기술 및 장비의 제공을 통한 자원확보이다. 자원확보라는 효과만을 고려한다면 특별히 어느 방법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법인가를 평가하기 어렵지만 제3국 공동수출의 가능성, 투자비용 및 자본의 회수기간 등을 감안하여 경영목적에 가장 적절한 방법의 선택이 요구된다. 브라질의 풍부한 자원에 대해 선진국들은 깊은 관심을 보여 대형 공동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으며, 원자재 확보와 공급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오래 전부터 공동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한국기업의 경우 브라질의 자원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많은 선결과제를 가지고 있다. 우선 브라질은 여타 중남미국가들과 함께 그 동안 자원 보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를 크게 장려하는 현 시점에서도 아직 보호주의적인 제도와 절차 등이 있어 브라질이 자원공동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부간에 협의과정을 통하여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약요인이외에도 한국기업들은 자원개발을 위한 기술축적이 선진 다국적기업들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자본공급능력 또한 불리하여 한국 측의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자원개발목적의 산업협력에 있어서는 양측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요구되며, 재정적 지원, 정책자원개발목적의 투자진출에 대한 금융과 조세지원 강화, 현지 혹은 선진기업과의 합작투자구성 지원과 나아가 공동개발촉진을 위한 정부간 교섭능력의 강화가 요구된다.

VII. 결론

한국과 브라질의 산업협력은 기본적으로 협력의 주체인 기업들이 자금, 기술력, 마케팅 등의 능력에 따라 추진되지만 정부 차원의 외교 통상적인 지원과 교류증진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브라질의 연방정부만 상대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제가 비교적 오래 전부터 정착되어 오고 있는 브라질의 경우 지방정부, 주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구축과 이의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 민영화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산하 공기업들의 민영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각 지역별 주 정부와의 생산적인 관계는 한국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플랜트 또는 자원개발사업, 한국기업의 현지경영과 관련되는 인프라 확충사업, 장기적인 목표에 따른 전략분야에의 진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세계 지원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이 이

루어져야 한다. 또한 UN이나 WTO와 같은 다자간 국제 기구 내에서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브라질과 정부차원의 산업협력 관계 증진과 기업들간의 교류증진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배려와 지원이 요구된다.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투자진출과 교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체제의 전환과 전문화가 요구된다. 대기업의 경우 자체 능력으로 해외시장의 잠재력 분석이 가능하며 현지 시장의 정보 수집 면에서도 해외 지사망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어 중소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의 대응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뒤지고 있어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기능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육성차원에서도 업종별 전문화를 이룬 중소기업이 국제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중소기업의 국제화정책을 수립,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브라질의 경우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제도적인 지원체제의 개선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 중소기업과의 교류, 그리고 진출 등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 이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소기업의 국제화와 이를 통한 투자 활성화와 교역 증대의 대안들을 찾아야 한다.

참고문헌

- 김원호, 「중남미의 신 경제질서와 우리의 경제협력 정책방향」,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 96-02,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 박영호, 『브라질의 자원개발현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 서동혁, 『한·중남미간 경제협력증진방안』, 서울: 산업연구원, 1991.
- 윤현덕, 「중남미시장 구조변화의 이해와 한국기업의 현지경영전략」, 『현지경영전략』, 최생립, 김지홍 편저, 서울: 한국경영학회, 1998.
- 정선우, 「브라질의 민영화 추진현황과 향후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사보고』 96-07,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 조희문, 『남미공동시장(MERCOSUR)』, 통상 92-04, 서울: 대한무역진흥공사, 1993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지역경제』 각 호. 1995, 96, 97, 98
- 대한무역진흥공사, 『중남미 각국의 수입관리제도』, 서울: 대한무역진흥공사, 1998.
- 한국경제연구원, 『새 정부의 정책과제』, 1997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연보』 각호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연구소, 『국별투자환경』,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1990-98.
- Almeida, Paulo Roberto de (coord.). MERCOSUL: *Textos Básicos*, Brasília : IPRI, 1992.
- _____ "NAFTA: Um Bloco Comercial em Construção", *Revista Brasileira de Comercio Exterior*, Rio de Janeiro, Ano VIII, 33 : 70-72, 1992.
- _____ "Solução de Controvérsias no MERCOSUL: o Protocolo

- de Brasília ao Tratado de Assunção”, *Boletim de Integração Latino-Americana*, 4 : 9-11, 1992.
- _____ “Dois anos de processo negociador no MERCOSUL : caminhos e instrumentos da integração”, *Boletim de Integração Latino-Americana*, número especial, 1993 .
- Barham, John, “Mercosur pact on customs”, *Financial Times*, Aug. 8, 1994.
-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in Latin America, 1995 Report: Overcoming Volatility*, Washington, D.C.: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5.
- McKinsey Global Institute, *Produtividade: A Chave do Desenvolvimento Acelerado no Brasil.*, 1998.
- The Economic Intelligence Unit, *Brazil : EIU Country Profile*, 1993-1998.